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2(금) ~ 2024.8.8(목)

제공일시 2024 08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2(금) ~ 2024.8.8(목)

제공일시 2024 08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EU 중국 전기차 관세 최종승인 유력, “중국 점유율 빠르게 올라 대비 필요”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인상하는 안을 두고 각 회원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옴
-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회원국들이 11월 중국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확정하는 방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
- EU는 7월 5일부로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적으로 17.4%에서 37.6%까지 추가 관세를 업체별로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함
- EU 27국 회원국은 잠정 관세를 향후 5년 동안 확정적인 관세로 전환할지 10월에 열리는 투표로 결정함. 이 투표에서 관세가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고위 당국자 발언이 나온 것임

[\(비즈니스포스트 2024.8.5\) 이근호 기자](#)

2. 美 에너지부, 폐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860억원 지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배터리 재활용·스마트 제조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섬
- 2050년까지 목표로 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전략임
-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배터리 재활용 확대와 스마트 제조 현대화를 위해 주·지방 정부에 최대 6300만 달러(약 86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해당 자금은 첨단 센서·모델링 등 첨단 기술을 개발·구현해 중소 제조업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더구루 2024 8 5\) 진유진 기자](#)

3. 태국, 내년에 탄소세 도입... 탄소 배출량 감축

- 태국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도입함
-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 탄소세 도입국이 됨
- 태국 정부는 지난달 디젤과 가솔린과 같은 석유 제품에 1톤의 CO2e당 200바트(약 7754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태국 정부는 탄소세 시행까지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 탄소세 시행으로 의무적 배출량 보고, 공식 기후 변화 기금,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량 거래 제도도 시행할 전망임

[\(더구루 2024.8.4\) 김소연 기자](#)

국내 정책

1.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 검토… “해외는 이미 의무화”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국토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임.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함. 배터리를 등록할 수 있는 브랜드도 늘림

[\(쿠키뉴스 2024.8.8\) 조운비 기자](#)

2.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외부 감축 활동 구체화

-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총량 관리 사업자가 할당 기간의 다른 연도 배출 허용 총량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또, 외부 감축 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절차를 정함
- 외부 감축 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 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함

[\(데일리안 2024.8.6\) 장정욱 기자](#)

3.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 출범

-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가 오는 6일 공식 출범한다고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5일 밝힘
-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확보한 약 2만2천500개의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6개 분야에 대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함
-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센터와 광역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함

[\(연합뉴스 2024.8.5\) 고은지 기자](#)

글로벌 기업

1. BP는 인도네시아서 CCUS 연구개발, 셰브론은 CCUS 부서 강화

-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이 CCUS(탄소포집 및 활용, 저장) 사업을 앞다퉈 강화하기 시작함
- 먼저, 영국의 에너지 대기업 BP는 인도네시아 반둥 공과대학(이하 ITB)과 협력해 인도네시아에서 CCUS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한다고 카본헤럴드가 2일(현지시각) 전함
-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파푸아 지역에 있는 탕구(Tangguh) CCUS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탕구 CCS 허브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 BP의 경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셰브론의 저탄소 사업부인 셰브론뉴에너지스(Chevron New Energies)는 신홍 사업라인을 CCUS 사업부로 합병하고, 크리스 파워스(Chris Powers)를 CCUS 사업부의 부사장으로 임명함

[\(임팩트온 2024.8.6\) 홍명표 기자](#)

2. 인도 아다니 그린에너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의존도 낮춘다… 패널 생산량 150% 확대

- 인도 아다니 그린에너지가 태양광 패널의 생산량을 150%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힘
- 아다니 그린에너지(이하 AGEL)의 CEO 사가르 아다니는 지난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TV에서 “연간 태양광 패널 제조 용량을 현재 4GW(기가와트)에서 최소 10GW로 늘리려고 한다”고 말함
- AGEL이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이유로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산 패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임

[\(임팩트온 2024.8.8\) 송준호 기자](#)

3. 日혼다·닛산 ‘동맹’에 미쓰비시 가세… EV·소프트웨어 협력

- 지난 3월 손잡은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와 닛산자동차의 ‘동맹’에 미쓰비시자동차가 합류하기로 함
- 이들 3사는 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다와 닛산이 지난 3월 포괄적 협업을 위해 체결한 검토 양해각서에 미쓰비시자동차도 합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일본 2위와 3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논의를 거쳐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기차(EV)의 구동장치 부품 공동화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024.8.1\) 경수현 기자](#)

4. 중국 창신메모리 자체 HBM2 양산, 미국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수출 규제 대비

-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 당초 목표로 했던 일정을 2년 가까이 앞당김
- 5일 톰스하드웨어와 디지털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CXMT는 당초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던 HBM2 대량 생산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

[\(비즈니스포스트 2024.8.5\) 김용원 기자](#)

국내 기업

1. 'CCS 사업 가속화' SK어스온, 호주 '탄소 저장소' 탐사권 따냈다

- SK어스온이 호주 해상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권을 획득함
- 이를 기반으로 SK어스온은 핵심 성장동력인 자원개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을 가속화할 예정임
- SK어스온은 약 6년간 해당 광구의 저장 용량 및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후 이산화탄소 저장소 개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에비엔뉴스 2024.8.8\) 임준혁 기자](#)

2. LS마린솔루션, 해상풍력 지원 선박 사업 추진

- LS마린솔루션이 대만 해상풍력 선박 전문업체 DFO와 해상풍력단지 건설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힘
- 이번 협약을 통해 LS마린솔루션은 DFO의 해상풍력단지 서비스용 선박(SOV)을 용선해 연내 국내 해상풍력단지 사업 입찰에 참여할 계획임. 국내에서 SOV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LS마린솔루션이 처음임
- LS마린솔루션은 DFO의 운용 노하우를 이전받아 국내 시장을 선점할 계획임

[\(매일경제 2024.8.8\) 정유정 기자](#)

3. 삼성물산, 美 전기차 충전시장 본격 공략... 법인도 설립

-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듦. 이를 위한 별도 법인까지 설립함
-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4월 미국 델라웨어주에 '삼성물산 차징 솔루션'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함. 이 법인은 미국 법인인 '삼성물산 아메리카'의 산하 계열사로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전담함
- 삼성물산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및 ESS 개발 사업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의 연계도 예상됨

[\(뉴시스 2024.8.2\) 유희석 기자](#)

4. 전기차 화재 막는다... 현대차그룹, 배터리 7대 안전정보 공개

-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의 열화 상태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전기차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임
- 현대차는 특히 관련 법만 개정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완성차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서울경제 2024.8.8\) 노해철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8.2(금) ~ 2024.8.8(목)

제공일시 2024 08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중국 국무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전환... 제15차 5개년 계획 발표

-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의 책정 방식을 바꿈. 중국 최고 행정기구인 국무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이를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기존에 에너지 사용량 또는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 왔음. 즉, 이는 경제 성장 수준을 고려해 배출량을 줄이려는 유동적인 배출 효율 관리 목표였으며, 경제 성장 속도보다 배출량의 증가 속도가 느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의미임
- 새 기준은 전체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고정된 목표를 설정해 탄소를 감축하는 절대 배출량 관리 방식임 국무원은 2030년 배출 정점과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런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음. 해외 미디어 블룸버그는 배출 정점이 될 2030년 전까지는 배출 효율 기준이 여전히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그 이후에 절대 배출량이 주요 목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음
- 국무원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전년도인 2025년까지 배출량 측정과 회계 방법론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임
- 중국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 통계와 회계제도 개선 및 산업별 탄소배출량 회계기준, 제품 탄소 발자국 기준을 도입하고 시행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실행할 예정임
- 5개년 계획은 크게 7가지 큰 목표와 15가지 세부 목표를 두고 시행됨. 큰 목표는 ▲탄소배출 관련 계획체계 개선 ▲지역 탄소 배출 목표 평가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기가산업의 탄소배출 조기경보 및 통제 메커니즘 탐색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관리 시스템을 개선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의 탄소 배출 평가 수행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가속화임
- 중국은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 탄소배출 지표를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집약도가 아닌 탄소 배출 집약도와 절대 배출량을 주요 지표로 활용할 계획임. 특히 2030년 이전에 탄소 정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게 15차 계획의 핵심임. 국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탄소배출 예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할 계획임
- 국무원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주요 제도에 대한 개정 사항도 함께 밝혔음
- 우선, 탄소배출권 시장이 바뀔. 국무원은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산업범위를 확장하고 유료할당 역시 검토해 기업이 탄소를 더 빠르게 감축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음

-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력,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 등 고배출 산업의 탄소배출 회계 규칙과 기준도 새롭게 제정하고 개정할 예정임. 현재는 발전사만 배출권 시장의 적용 대상이며 100% 무상할당 배출권을 얻고 있음

- 정부의 투자에도 온실가스 배출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이 반영됨. 정부가 투자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 배출관리가 반영된다고 국무원은 전했다

- 제품 탄소발자국의 측정 기준도 2027년까지 나옴. 대상 제품으로는 전력, 정유, 석탄, 철강, 시멘트, 비료, 수소, 시멘트, 유리, 에탄올, 합성암모니아, 카바이드, 리튬이온 배터리, 신에너지차 등임

[\(임팩트온 2024.8.5\) 송준호 기자](#)